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55
----------	------

발의연월일 : 2024. 8. 30.

발 의 자 : 김선민 · 김준형 · 조 국  
이해민 · 신장식 · 김재원  
장종태 · 서왕진 · 김원이  
박상혁 · 김남희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7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 ----- ----- ----- ----- ----- ----- ----- ----- ----- <u>. 다만,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lt;신설&gt;</u>	<u>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